

2009년 세계경제의 여건 변화와 한국경제의 과제

현 정 택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전 KDI 원장))

1. 세계경제 상황

2008년 9월 미국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 후 전세계적으로 금융 및 실물 부문의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고,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의 경기기도 크게 둔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전망기관들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지난해 10월 이후 가파르게 하향 수정해 오고 있다. 특히, IMF는 1월말 올해 세계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의 2.2%에서 0.5%로 대폭 하향조정하였고, 최근 다시 -0.5~-1.0%로 수정할 정도로 미국의 금융불안으로 촉발된 세계경제의 위기가 쉽게 진정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유로지역·일본 등이 속해 있는 선진국이 올해 -3.0%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중국·인도 등 지난 몇 년간 비약적 발전으로 높은 성장세를 구가해오던 개발도상국도 2% 내외의 부진한 경제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었다.

무엇보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 경제동조화 현상이 긴밀해짐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국경제가 지난해 말부터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중국경제의 둔화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중국 정부와 중앙

은행인 인민은행은 올해 8%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지난해 4/4분기 GDP 성장률은 6.8%로, 계절조정 기준으로는 거의 제자리 걸음 상태를 나타내 성장률 목표가 추가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한편 국제 금융시장은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언제라도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금융시장의 불안 확대가 실물경제 회복에 추가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세계 금융 및 경제 불안으로 인해 한국 경제도 심한 타격을 입고 있다. 지난해 4/4분기의 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5.1%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4분기에 기록한 -7.8%의 3분의 2에 이를 정도로 매우 부진했다. 금융시장 충격을 통한 내수의 위축이 수출이라는 실물경로 충격과 중첩되어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우선, 리만 브라더스 파산 직후의 국제 금융시장 공황 상태에서 대규모 외채 회수가 발생하여, 지난해 10월중 한국의 자본수지는 약 255억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금융시장 충격에 더하여, 지난해 11월 이후 수출이 급감하였는데, 이것이 성장을 급락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 증감율은 지난해 11월 -33.3%, 12월 -35.4%, 올 1월에 -38.6%를 기록하는 등 매우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2. 한국경제 전망

이러한 실물경기 부진을 감안하여, 올해 GDP 성장률이 전년과 비교하여 내수 및 수출 부문 모두 크게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는 상반기까지는 금융위기에 따른 자산 가치의 하락 및 경기하강에 따른 소득 및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하반기에는 충격이 완화되면서 소득 증가세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국내의 금융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고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가시화됨에 따라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투자는 공공부문의 SOC 투자 증가에 힘입어 토목부문이 상당 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하강의 여파로 건물건설 부문의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수지는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원유 및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상품수입 감소세에 기인하여 당분간 흑자 기초가 지속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중 점진적으로 안정되면서 연평균으로도 2008년의 4%대 중반에 비해 상당 폭 하락한 2%대 중반을 기록할 전망이다. 2008년 상반기의 물가 상승을 견인했던 국제원유 가격이 하락세로 반전함에 따라 수입물가가 안정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국내 경기하강으로 인해 수요압력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2009년 물가상승률은 2%대로 하락할 전망이다. 반면, 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3%대 중반을 기록할 전망이다.

IMF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4%로 전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대외부문 비

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세계경제 둔화에 따라 교역재의 생산부문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점과 지난해 4/4분기의 성장률이 당초 예상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으로 급락한 것을 반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수출품의 향상된 경쟁력, 그리고 지역별·품목별로 다변화된 수출구조 등을 감안하면 우리경제는 과거보다 대외부문의 충격을 흡수할 여지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적극적인 경제안정화 대책의 효과 등을 감안하면 IMF의 전망치는 지나치게 비관적인 측면이 부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경제가 직면한 불확실성의 크기와 복잡성을 감안하면 성장률 전망 수치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올해 우리경제는 수출부문에서 비롯된 실물부문의 침체는 일정기간 지속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상황변화를 감안하면 우리경제의 경기 급락세는 올 상반기 중에 진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적극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한국경제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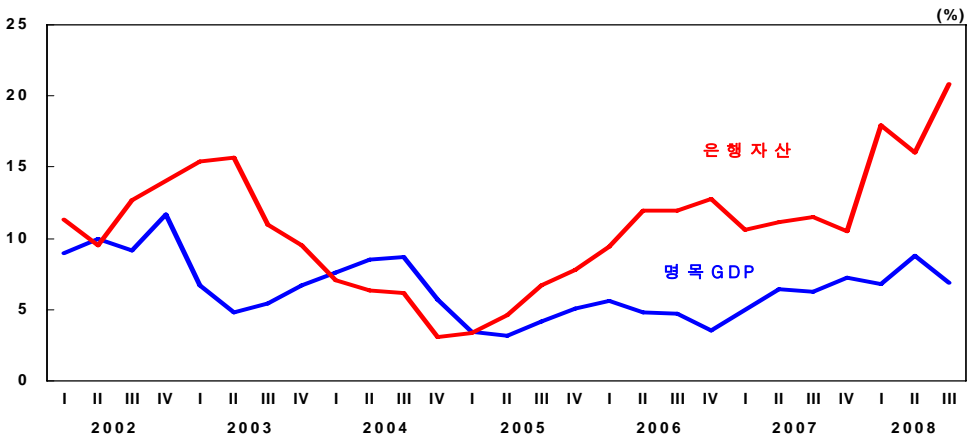
한·미 및 한·중 통화스와پ 체결, 한·일 통화스와پ 확대 등은 외환보유액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킴으로써 외환시장의 단기적 공황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실물경제 및 시스템 전반의 안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외환시장의 불안요인이 지속적으로 출몰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에도 유동성 확보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 구조조정 및 금융기관 자본 확충 노력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지난 수년간 은행권의 공격적인 기업대출을 통한 자산 확대 경쟁이 지속되면서 은행의 총자산은 명목GDP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였음을 감안할 때, 기업부문에 대한 일정 수준의 대출 축소와 이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부실자산 처리를 위해 기존의 자

산관리공사의 기능을 확대하거나 임시적인 공적처리기관(Bad Bank)을 설립하여 대처할 필요도 있다. 과거 외환위기 경험에서 볼 때 부실은 사전에 충분

한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며, 부실 자산의 분리 및 처리를 위해서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절차가 불가피하다.

〈그림〉 명목 GDP 성장률과 일반은행 총자산 증가율



내수 확대를 통한 고용 유지도 각별히 신경써야 할 대목이다. 세계경제 급락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급락이 불가피하다하더라도, 금융시장 안정을 통해 내수급락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는 고용 유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높은 현 상황에서는 거시적 차원에서 내수 급락을 완충하는 것이, 단편적인 고용증대 대책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취업자 증가율은 수출보다는 내수변동에 의해 대부분 결정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경기급락을 완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재정지출은 초기에 집중하여 집행하는 한편, 지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하여 재정확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SOC 분야에 있어서는 진행 중인 사업의 공기 단축과 타당성 검증을 거쳐 확정된 사업의 조기 착수에 집중하여 집행시차를 최소화하는 한편,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재정지출의 2차 효과를 증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업급여 및 근로장려세제(EITC) 급여의 수준 제고, 긴급구호 확대, 차상위층에 대한 부분급여 제도의 도입 등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예상을 뛰어넘는 경기하강의 정도와 금융 부문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추경예산을 신속히 실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추경예산은 금융권의 구조조정에 소요될 자금, 사회안전망 확충, 진행중인 SOC 사업의 조기 추진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눈 앞에 닥친 경제위기 극복 못지 않게 성장잠재력 확충이 중요한 시점이므로, 중장기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위기 여부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녹색성장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현 시점에서 경제위기 극복 자체보다 근본적이고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련 SOC 투자 확대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육, 연구개발, 대체에너지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및 제도적 개선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위기 과정에서 범세계적인 산업구조 조정이 예상되는바, 성장잠재력 확보에 성공할 경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경제위기 극복 이후 대폭 확대될 것이다. 또한 규제완화 및 공공부문 개혁은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미 FTA의 비준, 법질서 확립, 서비스부문과 중소기업

업의 선진화 등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과제이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기하강 현상은 그 폭과 범위를 감안할 때 일반적인 경기순환상의 변동과는 달리 심각한 수준인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금융, 통화, 재정정책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면서 정책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